

전원 수리나 일부 유임이나... 文대통령, 이르면 오늘 결단

정권 출범 이후 첫 집단 사표... "순전히 대통령 결단에"
文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에서 입장 밝힐 가능성 제기
노영민 교체로 文 정부 3기 출범 등 조직개편 가능성

"오래 끝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의 사표 수리 여부를 두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같이 답변했다. 이르면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표 수리 여부를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 실장과 수석비서관급에서 김조원 민정·김외숙 인사·김거성 시민사회·강기정 정부·윤도한 국민소통수석 5명은 지난 7일 문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하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알렸다. 이제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주말 동안 특별한 외부 일정 없이 사표 수리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있던 집단 사표이고 여러 가지

고민이 뒤따르지 않겠느냐. 이제는 순전히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단 집단 사표 수리 여부는 신속하게 결정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권의 아킬레스건과도 같은 '부동산' 이슈가 청와대 참모진들로부터 논란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만큼 사태를 신속히 매듭지어 상황 수습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사표 수리의 폭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문 대통령이 사표를 일괄 수리하거나 선별해 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체로 '경질성 인사'를 하지 않는 문 대통령의 특성상 사표를 일괄 반려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나, 다주택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라 상황의 특수성을

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의 성정만을 판단의 잣대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에 대한 책임으로 참모를 내보내는 것 자체가 대통령 스타일의 인사가 아니라며 냉정하게 바라보고 과실을 따지신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을 비롯해 후임자를 찾기도 전에 무조건적으로 사의를 표명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미 사전에 문 대통령과도 이야기는 됐기 때문에 언론에 공식적으로 알린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사표 제출 참모 중에는 김조원·김외숙·김거성 수석이 여전히 다주택자 명단에 속해 있고 '직 대신 집을 택했다'는 비판이 야권과 온라인 중심으로 번지고 있어 민심 이반 사태도 마냥 두고만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괄 내지는 선별·순차 처리 방침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게다가 부동산 문제와 관계없이 이미 지난해 말부터 비서실장을 포함해 일부 참모



교체 작업을 준비해오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수리하는 데 국정 공백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비서실장과 정부수석, 소통수석의 경우 후임자 물색에 착수했던 상황이고 민정·인사·시민사회수석 자리의 경우 이제 막 후임자 검증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 시간을 두고 교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노 실장의 경우 비서실장으로 일한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교체할 시기도 됐다"며

"정무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임명된 노 실장은 19개월째 청와대에서 근무 중이다. 현재까지 노 실장의 후임으로 젊은 참모가 외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수석 후임으로는 최재성 전 의원, 소통수석 후임으로 박수현 전 대변인이 오르내린다. 김외숙 수석이나 김거성 수석 등을 포함해 일부 참모 유임 가능

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문 대통령의 장교가 주 후반으로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아울러 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청와대 내부 조직개편도 빨라지면 서 문제인 정부 3기 출범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당초 내년 1월쯤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3기를 출범시킬 계획이었다. 또 청와대 인적쇄신과 맞물려 정기국회 전인 이달 말 개각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윤호 기자

정세균 총리 "담양·곡성,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되도록 건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전남 곡성군 오산면 성덕마을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사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집중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광주·전남지역을 찾아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남 중남 아산을 찾은 데 이어 연일 수해 현장을 찾아 다니며 상황 점검에 나서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광주 서구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 전국적인 홍수 관리 상황과 기상전망, 4대강 유역

별 홍수관리 상황 등을 보고 받은 후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정 총리는 "침수피해가 막심해서 참으로 걱정이 크다"며 "기상 예보 공급자인 기상청과 수요자인 홍수통제소와 환경부 등이 함께 평가를 제대로 더 세밀하게 해서 예보 적중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후 산사태로 주택

매몰사고가 발생한 전남 곡성군 오산면 피해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곡성군 오산면은 지난 7일 산사태 피해로 5명이 사망하고 주택 5채 매몰, 주민 55명이 대피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갑작스런 엄청난 강우량 때문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재산피해도 막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과 피해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서 하루 빨리 피해가 복구되고, 앞으로 유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정부와 국회가 협치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함께 힘을 합치겠다"며 "이번 재해를 극복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군·경찰 그리고 자원봉사자 분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마지막으로 마을 침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담양군 무정면 피해현장도 점검했다. 정 총리는 "뜻하지 않게 엄청난 수해를 당해서 사망자도 생기고, 실종·부상 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도 막심한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선 급한 것은 속도전으로 신속하게 복구하지만,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이런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대통령께 건의드리겠다"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며, 공직자·경찰·소방·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전국적으로 뜻하지 않게 엄청난 피해를 본 국민들을 잘 보살피고 필요한 시설을 복구하는 데 정부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김기태 도의원, 순천시민 권리 되찾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발의 "환영"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은 순천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을 표시했다. 김 도의원에 따르면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되며 순천시 갑·을로 나뉘어 운영되던 통합 순천시는 지난 16대 총선 때 합구 된 이후 지금의 순천시 선거구로 자리 잡았다. 제19대 총선에서는 곡성군과 합구했던 이력도 있지만 제20대 총선에서 다시 순천 단독 선거구로 환원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1대 총선 선거구 확정 과정에서 '분구' → '쪼개기'로 뒤집어졌다. 이에 선거구 확정과정에서 농산어촌 거대 선거구를 놓고 지역 사회에서는 큰 갈등을 빚었다.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소병철 의원은 "잘못된 선거를 바로잡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공약은 국회에 임성하자마자 곧바로 현실화 되고 있다.

소 의원은 인구 비례 기준만 획일적으로 적용해 온 선거구 획정에 추가로 면적 기준을 도입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도의원은 "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면적을 명시하고, 선거구 전체 평균 면적의 3배를 초과하거나 3분의 1 미만인 경우 각각 상·하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체 인구편차의 15% 내에서 인구비례 기준 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산어촌 지역은 선거구 획정의 하한기준보다 인구가 적더라도 전체 인구편차의 15% 범위까지는 하나의 선거구로 독립할 수 있어 도농 간의 인구 격차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229-6000
기사제보 222-2580
광고 직통 228-258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